

여성·소비자단체들의 새해 활동 청사진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주요 단체의 활동계획을 점검해본다.

◇ 여성계=올해 여성계 활동의 초점은 95년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 등)은 올해의 중점사업을 '지방자치와 여성정치 참여'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올해를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여성의 정치지도력 훈련 △여성유권자 및 선거운동원 교육 등을 펼 계획이다.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방안 연구, 남북여성교류, 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 대한 준비작업에도 여성단체들

■ 여성·소비자단체 새해 청사진 ■

여성계 “정치참여 기반구축의 해”

선거법개정등 추진...‘가정의 해’ 행사 다채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물가’ 감시 역점

이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생활에 남성참여 증대방안, 가정의 구조 및 기능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YWCA)는 장애자부모, 고3 자녀를 둔 부모, 고부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모 등의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소년소녀 가장과 자매결연을 하는 '한

가정 꾸미기 운동' 등의 사업을 벌이며, 한국여성연맹은 모범가정상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세미나 등의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도 일본 군대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배상요구 작업을 펴는 한편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조사 등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린다 차베스의 조사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 소비자운동=올해 소비자보호기관·단체는 지난해말 우루과

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해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로 잡아 수입 소비재의 유통구조·가격전락·안전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실태, 잔류농약 함유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보화 시대의 소비자단체 역할'을 올해 사업주제로 정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에 소비자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해 성실하게 알리는 작업을 펴기로 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도 올해를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소비자운동의 해'로 정하고, 상반기중 수입상품 고발창구 개설, 수입품의 안전성과 품질검사 강화, 수입상품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국내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춰 '수입상품 불만 고발센터'를 열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와 수입공산품의 품질표시제를 정착·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부인회에서도 수입상품 검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는 큰 폭으로 오를 물가가 서민경제에 최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물가 감시에 비중을 두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주부교실중앙회는 유기농산물 직거래활동과 우리 농산물 먹이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